

일본 유기농업의 발자취와 미래

나카지마 기이치(中島紀一)

전 일본유기농업학회 회장, 이바라키 대학 농학부 교수

1. 일본 유기농업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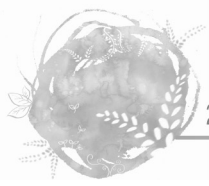
일본에서 ‘유기농업’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10월 이치라쿠 데루오(一樂照雄, 1906-1994) 등이 ‘일본유기농업연구회’(현 이사장은 사토우 기사쿠 (佐藤喜作))를 설립한 이후로 알려져 있다. 이 ‘유기농업’이라는 말은 Organic Farming 을 번역한 것으로 이치라쿠가 만든 용어라고 한다.

일본유기농업연구회는 처음에는 근대 농업의 현 상황, 먹거리와 의료, 건강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농업관계자들이 모이는 ‘현자들의 살롱’과도 같은 것으로 설립되었다. 하지만 그 후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과 유기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다수 참여하게 되면서 유기농업 운동을 추진하는 조직으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연구회 기관지는 1976년 2월호까지 ‘먹거리와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었고 그 후에는 ‘휴과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고 있다. 또한 이치라쿠는 연구회 설립 수 개월 전에 ‘농업과 의료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유기농업연구회’ 설립을 출발점으로 하는 일본의 유기농업 운동은 농업 운동일 뿐만 아니라 ‘먹거리’ ‘건강’ ‘의료’ 등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의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일본에는 이처럼 일본유기농업연구회로 시작되는 유기농업 운동의 전개에 앞서서 ‘자연농법’을 제창하는 유기농업의 오랜 역사가 있었다. 1930년대에 종교가인 오카다 모키치(岡田茂吉, 1882-1955)와 농업철학자인 후쿠오카 마사노부(福岡正信, 1913- 2008)는 제각기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휴과 농작물의 힘을 끌어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농법을 제창하였으며 그 농법을 각각 ‘자연농법’이라 불렀다.

오카다는 세계구세교(世界救世教)의 창시자이자 교조(教祖)였다. 1935년에 오모토(大本)교에서 분리되어 나온 후 ‘정령(淨靈)’, ‘예술’, ‘자연농법’의 3 가지를 주요한 종교활동으로 삼고 있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자연농법을 교단 외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자연농법에 대한 조직적인 각종 활동은 ‘일본유기농업연구회’가 발족한 후에도 독자적으로 계속되었으며 자연농법을 실천 하는 사람도 많아서 일본 유기농업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혹시나 하여 부연 설명하자면 양쪽의 활동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며 자연농법 관계자도 ‘일본유기 농업연구회’의 설립과 그 후의 운영에 참가하여 왔다. 특히 기술 측면에서는 자연농법관계자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해왔다. 또 스스로의 활동을 ‘자연농법’이라 부르는 점에서 유기농업의 전개방향성에 있어서 자연과의 공생이라는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왔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연농법을 포함한 유기농업의 이러한 활동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전국 각지의 도시 지역에서 지역생협이 급성장을 이루었다. 지역생협 성장의 이유로는 식품첨가물이나 잔류농약 문제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 첨가물 사용량을 규제하는 생협의 독자규격인CO-OP상품(생활협동조합 상품), 농약사용량을 줄이려는 농민 그룹과의 연계를 통한‘생협직산(生協産直)’등의 상품 정책이 큰 호응을 얻었다. 식품 안정성이나 유기농업에 관한 이러한 사회동향 속에서 농산물 시장유통의 측면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 등의 생산방식 표시가 많아 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표시의 대부분은 확실한 기준이 없는 것이었고 근거 없는 것까지 범람하게 되었고 소비자가 유기농업 등의 생산방식 표시에 대해 느끼는 혼란과 불신감이 깊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따라 1990년대에는 유기농업 등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제도상의 관여가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1961년에 농업기본법이 제정된 이래로 거국적인 농업근대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그 정책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적극적인 사용이 장려되었고 그 결과 농업종사자의 농약중독, 농촌의 환경오염, 먹거리의 농약오염, 농촌의 자연파괴 등등, 농업과 농촌환경 및 먹거리 안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농업정책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정책의 정책 방향전환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유기농업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로 인해 일본정부 내에서는 유기농업 운동이 반정부 활동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으며 그 영향으로 정부는 유기농업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대응을 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우선 농촌의 지역활성화 활동의 한 유형으로써 유기농업 등과 관계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고 정부주도로 농산물의 시장 유통시의 표시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1992년 정부는 ‘유기농산물 등의 특별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또 같은 해에 우루과이라운드 교섭타결에 대비하여 정부는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써 새로운 정책을 수립했고 그 속에서 환경보전형 농업추진이 농업정책의 대들보 중 하나로 정의되었다. 그리고 유기농업은 환경보전형 농업의 한 형태로 정의되었다. 정부 조직으로는 1989년에 농림수산성 내에 유기농업 대책실이 설치되었고 1992년에는 환경보전형 농업대책실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농업환경대책과로 확대개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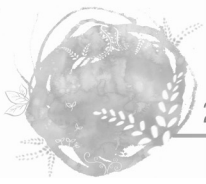
1999년에는 농업기본법을 대신하는 ‘식량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새로운 기본법에서는 농업근대화 정책, 대규모농업경영육성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한편 농업과 농촌이 가진 다면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정책방향이 세워졌고 농업이 본래 가지고 있는 물질순환 기능의 의의가 명기되는 등, 환경에 대한 농업정책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방식의 도입촉진법’이 제정되어 환경보전형 농업추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가 정비되었다. 이와 동시에 농산물의 품질표시에 관한 ‘JAS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이어 2001년에는 유기농산물의 국가인증제도(유기JAS제도)가 구축되어 실시되었다.

이처럼 21세기 초반부터 일본의 농업정책에서 유기농업과 환경보전형 농업에 대한 제도 및 시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게 되었으나 그 속에는 심각한 문제도 내재되어 있었다. 한국의 친환경농업정책에서는 유기농업이 환경농업의 첨단분야로써 정의 되었고 그 전개 방향에 있어서도 그러한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초반의 일본 농업정책에서는 유기농업이 환경보전형 농업의 특수한 작은 한 형태로 정의되었을 뿐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이 유기농업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유기JAS제도는 유기농산물 유통에 대한 국가의 엄격한 관리제도로 만들어졌고 그 속에는 유기농업 추진에 대한 농업정책 의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유기농업은 유기JAS제도의 틀 속에 갇혀 자유롭게 발전해 나갈 힘을 잃었고 그 결과 힘이 약화되어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채 쇠퇴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폐쇄적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2006년 12월에 ‘유기농업추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유기농업은 농업이 본래 나아가야 할 모습으로써 정의되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민간과 연계하여 유기농업 추진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획기적인 법이었다. 이 법은 초당파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유기농업의원 연맹의 의원제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의원 연맹의 설립취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우리들은 인류의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식량이 본디 자연의 섭리에 따라 건강한 흙과 물, 대기에서 생산된 안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인식 하에 자연의 물질순환을 기본으로 하는 생산활동 특히 유기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04년 11월)

이 법률의 제정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민간과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유기농



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민간 부문에서는 이 법의 제정으로 일본 유기농업이 다음 세기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본유기농업학회는 유기농업의 사회화, 정책화,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1999년에 설립되었다. 본 학회는 유기농업추진의원연맹이 추진하는 방향에 전폭적으로 협력하여 유기농업정책연구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혼쵸 노보루(本城昇) 아다치 고이치로(足立恭一郎) 등이 ‘유기농업추진법시안’의 초안을 만들어 의원연맹에 제언 하는 등 ‘유기농업추진법’ 제정에 깊이 관여하였다.

2. 유기농업추진법과 그 후의 정책 전개

유기농업추진법은 모두 15개 조로 이루어진 짧은 법률로 일본정부의 유기농업 추진 정책의 틀을 규정하는 기본법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으로는 다음의 4가지 점을 들 수 있다.

- ① 정책추진의 전제로써 유기농업추진의 이념을 밝히고 있다. 이 점은 앞서 시행되고 있던 유기JAS제도가 유기농업의 사회적 의의나 추진이념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유기농산물 규격기준의 제정부터 시작된 것과 비교하면 대조되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유기농업 추진 책임을 규정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정책항목이 조문에 명확히 규정되었다. 구체적인 정책항목으로서 ‘유기농업종사자 등에 대해 지원’ ‘기술개발 등의 촉진’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관심 증진’ ‘유기농업 종사자와 소비자의 상호이해를 증진’ ‘조사 실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서 하고 있는 유기농업추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원조한다’ ‘유기농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등의 8가지 항목이 규정되었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기농업종사자 등의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유기농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유기농업 추진이라는 행정 방식 규정은 이 법의 큰 특징이 되고 있다.
- ④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농업 추진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으며 중앙정부는 ‘유기농업추진기본방침’을 세워야만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에 맞추어 유기농업추진계획 수립에 노력해 야만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일본정부는 법률제정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유기농업추진 기본방침을 만드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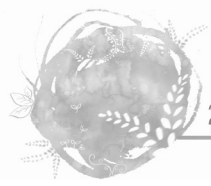
을 시작하여 2007년 4월에 공표하였다. 이는 매우 신속한 대응으로 2008년도부터는 정부의 유기농업 종합지원대책이 시행되고 소규모이나마 정부의 예산으로 유기농업 지원시책이 시작되었다. 종합지원대책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 내용은 넓은 범위에 미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유기농업 추진사업’ 즉 유기농업 모델타운 사업실시는 큰 효과를 가져왔다. 2009년도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추가적인 채택도 포함하여 전국 59개소에서 유기농업 모델타운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각지에 ‘지역에서 확대되는 유기농업’의 물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유기농업추진계획’이 만들어졌고 2009년도 말에는 거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수립이 완료되었다. 그 계획의 내용을 보면 지역의 유기농업종사자, 소비자, 관련사업자 등과의 협동체제 구축이 중요 과제가 되어 있으며 계획수립 작업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당국과 유기농업 종사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결과도 가져왔다. 각 지역의 유기농업 실태조사 등도 폭 넓게 실시되어 지역의 유기농업 실태파악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기농업은 이제까지 뜻 있는 농업종사자와 그를 지원하면서 유기농산물을 귀중한 먹거리로써 삼고자 하는 소비자들과의 연계로 유지 및 발전해왔다. 달리 설명 하자면 유기농업은 주로 굳건한 양자 간의 관계로 지탱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에 지금까지의 유기농업이 가지는 강점과 협소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기농업추진법이 제정되었고 그 속에서 유기농업은 일부 뜻있는 사람들의 것이 아닌 국민 모두를 이롭게 하는 농업형태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단계에서 제기된 추상적인 정책과제가 ‘지역의 유기농업 확대’ ‘유기농업 마을 만들기’라는 방향이었다.

지역에는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고 소비자 중에도 유기농산물을 구매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또한 지역에는 농업과 관계 없는 산업도 많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주민,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유기농업의 확대가 지역의 모두를 이롭게 하는 방법의 탐구가 ‘지역의 유기농업 확대’ ‘유기농업 마을 만들기’ 라는 정책적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가치관, 농업관을 서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지역과 지역농업이 나아갈 올바른 길로써 유기농업이 자리하도록 노력해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지역의 유기농업 확대’라는 접근방법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의 자연과 풍토를 후세에게 남기고자 하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방향도 모색되고 있다. 그 속에는 유기농업의 전개를 지역의 새로운 공공성형성이라는 정책전망 속에 자리잡게 하고자 하는 시점도 요구 받게 되었다.



3. 유기농업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시점

너무 간략한 설명이었으나 일본 유기농업의 역사와 유기농업추진법 제정 이후의 정책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유기농업 역사는 훨씬 더 폭과 깊이가 있으며 여러 사회적 현상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져 왔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주의해야만 할 시점(視点)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큰 부분부터 말하자면 일본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의 바람직한 모습,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 바람직한 생활, 먹거리와 건강의 바람직한 방향, 노동의 올바른 모습, 산업의 올바른 모습, 도시와 농촌 등의 지역의 바람직한 길 등이 크게 변화하고 재편되는 속에서 다양한 모순이 노출되었으나 유기농업의 형성과 전개는 이러한 모순을 직시한 진지한 대응이었다고 하는 점이다.

이는 근대에 대한 재검토라는 문맥에서 보는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으로 보면 유기농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실천 속에 농본주의, 중농주의 주장의 색이 짙게 깔려있는 의미가 확실해진다. 유기농업에 함의되어 있는 자연공생적인 농업 재건, 사회 속에서의 농업의 복권이 라는 메시지는 21세기 초반인 지금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이 사실과 관련하여 지금 근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급과 순환을 중시하는 사조는 조용히 확대되고 있으며 유기농업에 함의된 신토불이 의 사상, 물질순환, 생명순환, 지역순환의 사상과 유기농업이 실천하고 있는 부분은 자급과 순환을 중시하는 사조와도 이어져 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하니 모토코(羽仁もとこ, 1873-1957)가 제창한 ‘친구의 모임(友の会)’등의 생활운동 등에는 대량소비 사회라는 추세에 맞서서 견실한 생활 문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었다. 이러한 활동도 유기농업에 선행하여 함께 진행된 노력으로써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공해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한 민중운동도 유기농업을 지탱해 온 중요한 배경이었다. 다나카 쇼조(田中正造)가 고발한 아시오 광산의 환경오염문제(足尾鉍毒事件), 수은 오염으로 인한 미나마타 병(水俣病), 수은 오염으로 인한 아가노 강(阿賀野川) 사건, 가미오카 광산의 카드뮴 오염으로 인한 이따이이따이병(イタイイタイ病), 카드뮴 오염으로 인한 안나카(安中) 공해 사건 그리고 제초제로 인한 다이옥신 오염 등등 환경 문제가 일본 유기농업운동의 후계자들에게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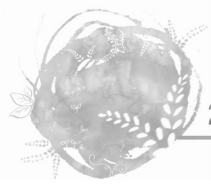
먹거리와 의료 그리고 건강의 새로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민간의 노력도 유기농업은

동과 함께 진행된 중요한 존재였다. 일본에서 이 영역은 ‘식양(食養)’이 라는 말로 개괄할 수 있다. 일본적인 식양의 원류로는 13세기에 불교의 선종 조도종(曹道宗)을 개교한 도겐(道元, 1200-1253)의 책인 텐조교훈(典座教訓)과 본초학자인 가이하라 에키켄(貝原益軒, 1630-1713)의 책인 요조훈(養生訓)등이 거론되며 그 후로는 군의(軍醫)인 이시즈카 사겐(石塚左玄, 1851-1989)과 그 뒤를 잇는 사쿠라자와 유키카즈(桜澤如一, 1893-1966)의 식양법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시즈카는 건강의 근본원리로 신토불이와 일물전체주의를 강조하였고 사쿠라자와는 중국의 역학설을 적용해 먹거리를 분류하고 난치병 치료나 건강한 식생활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사쿠라자와의 식양법은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군의인 히노 아츠시(日野厚, 1919-1989)는 환자의 증상에 맞는 식양법을 모색하여 ‘생태학적 영양학’의 구축을 제창하였다.

사회사상 분야에서는 20세기 초엽에 흥성했던 자연지향 문학과 문학운동도 선구적인 유기농업운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도쿠토미 로카(徳富蘆花, 1868-1927)의 작품 「지렁이의 헛소리(みみずのたわごと)」, 구니키다 돗포(國木田獨歩, 1871-1908)의 「무사시노(武蔵野)」, 나가츠카 다카시(長塚節, 1879-1915)의 「흙(土)」, 미야모토 겐지(宮元賢治, 1896-1933)의 「봄의 이수리(春の修羅)」 등은 오늘날의 자연공생사상 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문학집단 시라카바파(白樺派)의 리더 중 한 명이었던 무사코지 사네아츠(武者小路実篤, 1885-1976)의 제창으로 시작된 ‘새로운 마을(新しき村)’은 미야자키 현과 사이타마 현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유기농업도 계속되고 있다.

세계구세교의 오카다 모키치(岡田茂吉)가 ‘자연농법’을 제창했다는 사실은 이 글의 초반부에서 말한 바 있다. 오카다는 처음에는 오모토(大本)교에서 종교활동을 하였다. 오모토 교의 교조인 데구치 나오(出口なお, 1837-1918)은 “흙을 소중히 하라”고 설교하였고 농업중시 사상을 종교사상의 기본에 두었다. 오모토교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민간 농업기술단체로서 아이젠미즈호카이(愛善みずほ会)를 설립하였고 지금도 활동하며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1930년에 시작된 쇼로쿠신토야마토야마(松縁神道大和山)도 자연과 농업을 중시하는 교파로 신자 중에 유기농업 종사자가 많고 유기농업 자재개발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기독교계에도 유기농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있다. 고타니 준이치(小谷純一, 1910 -2004)가 만든 전국애농회(全國愛農会)도 그 중 하나이다. 기독교 신자인 고타니는 무교회파인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종교활동과 유기농업을 융합한 애농운동을 제창하였다. 그 이념 하에 농업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기독교 선도자의 양성장소로서 ‘농촌전도신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그곳에도 농장을 만



들어 유기농업에 힘쓰고 있다. 또 아즈기 현의 나스가하라(那須が原)에 있는, 아시아의 농민 교육에 힘쓰고 있는 ‘아시아학원(アジア学院)’은 1973년에 농촌전도 신학교에서 분리 설립된 것으로 여기에서도 유기농업을 가르치고 있다.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전쟁 전의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우애를 설교한 기독교적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적 사회를 제창한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 1888 -1960)도 농업을 중요시했다. 가가와는 유럽의 독립자영농민을 목표로 삼아 농림복합 의 ‘입체농업’을 제안했으며 그 내용은 유기농업이었다. 가가와와 제안이 실천으로 옮겨진 경우는 적으나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유기농업기술에 있어서 근대화 이전의 농업기술에서 많은 부분을 물려받았다. . 화학비료나 농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과 작물의 생명력에 의존하는 유기농업의 기술론은 근대화 이전의 농업기술론의 왕도였다. 일본에서는 전후의 농지개혁 후 1950년대는 그러한 전통기술이 민간기술로서 크게 개화한 시기였다, 이 무렵의 민간기술은 오늘날 일본의 유기농업기술에서 중요한 뼈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의 유기농업에서는 농업경영의 중요한 방식으로써 유축복합농업이 제창되었고 이 주장은 농업경영형태론에 따르면 소농주의의 흐름을 계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실천 사례를 보면 유기농업은 다양한 경영형태에 적합한 농업경영 방식이며 소농론에만 기반하는 것은 아니나 소농론이 유기농업의 중요한 기반 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소농론은 즉 가족경영론이며 또 소규모 경영론이기도 하며 농업역사가인 모리타 시로(守田四郎, 1924-1977)의 「농업은 농업이다(農業は農業である)」나 민속학자인 미야모토 즈네이치(宮本常一, 1907-1981)의 상민론(常民論)등과도 공통된다. 또 E.S 슈마허의 「작은 것은 아름답다(1973)」 또는 적정기술론 등의 생각방식이나 사회비전과도 연관되어 있다. 소농론의 계보를 계승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갈 것인가도 유기농업론의 중요한 과제이다.

소농론은 생활과 자연을 중시하는 풍토적인 지역농업론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본의 유기농업은 ‘지역의 유기농업 확대’전개가 중요 과제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한다면 일본 유기농업에게 이 국면은 익숙하지 못한 분야이다. 유기농업은 다른 것과의 차이를 명백하게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특성이 강하며 서로 다른 주체가 공존하고 협력하여 지역 만들기를 하는 방식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유기농업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배우면서 조금씩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자기혁신을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日本における有機農業の歩みを振り返って

中島紀一

前日本有機農業学会会長 茨城大学農学部教授

1. 日本における有機農業の歩みの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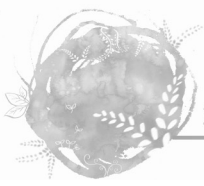
日本で「有機農業」という言葉が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1971年10月に一楽照雄（1906~1994）らによって「日本有機農業研究会」（現理事長は佐藤喜作氏）が設立されてからであった。

この言葉は英語の Organic Farming の翻訳語として一楽によって造語

されたものとされている。この組織は、当初は近代農業の現状、そして食と医の健康の現状を憂慮する農業関係者の賢人サロンのようなものとして設立されるが、その後有機農業の実践者や有機農産物を求める消費者が多数参加するようになり、有機農業運動の推進組織として展開し現在に至っている。同研究会の機関誌は『土と健康』と題されており、その前の最初の誌名は『たべものと健康』であった（1976年2月号まで）。また、一楽は同研究会の設立の数ヶ月前に「農と医の懇談会」を開催している。これらの点に示されているように、「日本有機農業研究会」の設立を出発点とする日本の有機農業の運動は、農業運動というだけでなく「食」「健康」「医」などとの関連が強く意識された運動として展開されてきた。

日本には、このような日本有機農業研究会に始まる有機農業運動の展開に先立って、「自然農法」を提唱する有機農業の長い実践の歩みがあった。1930年代に、宗教家の岡田茂吉（1882~1955）、農業哲学者の福岡正信（1913~2008）はそれぞれ別個に、農薬や化学肥料に頼らず土と作物の力を引き出すことを基本に農法を組み立てていくことを提唱し、それをそれぞれを「自然農法」と呼称してきた。岡田は世界救世教の創始者であり、教祖であった。1935年に大本教から分かれて立教された世界救世教は「浄霊」「芸術」「自然農法」の3つを宗教活動の主な柱としている。1950年代以降には自然農法の教団外への普及活動も積極的に取り組まれてきた。自然農法の組織的諸活動は「日本有機農業研究会」発足後も独自のものとして進められてきており、実践者の数も多く、日本の有機農業の重要一翼をなしている。念のため付言すれば、両者は離反しているのではなく、自然農法関係者も「日本有機農業研究会」の設立とその後の運営にも参画しており、とくに技術の面では自然農法関係者のリーダーシップは大き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また、自らの実践を「自然農法」と自称することによって、有機農業の展開方向性について自然との共生というあり方を明示してきたという点で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

1980年代になると、自然農法を含む有機農業のこうした展開への社会の関心は高まり、有機農



産物への需要も拡大していった。この時期に日本では各地の都市部で地域生協が急成長を遂げた。地域生協の展開背景には、食品添加物や食べ物への農薬残留など食の安全性への不安感の高まりがあった。生協の独自規格で添加物使用を抑制した「コープ商品」、農薬使用を減らす取り組みをしている農業者グループとの提携による「生協産直」などの商品政策が強く支持されていった。食品の安全性や有機農業に関するこれらの社会動向のなかで農産物の市場流通の場面でも「有機」「無農薬」等の生産方法表示が目立つようになった。しかし、それらの表示の多くは野放図であり、根拠のない表示も氾濫してしまい、これらの生産方法表示に対する消費者の困惑や不信も広がってしまった。

こうした時代状況を踏まえて1990年代には、有機農業等に対して国や自治体の政策や制度の関与が始まっていった。

日本では1961年に農業基本法が制定され、それ以来、農業近代化政策が国をあげて推進されてきた。この政策においては農薬や化学肥料の積極的使用が奨励され、その結果、農業者の農薬中毒、農村の環境汚染、食品の農薬汚染、農村自然の破壊などの農業農村環境問題や食べものの安全性問題が作り出されてしまった。有機農業の運動はこうした国の農政を強く批判しその転換を求めるものとして展開された。そのため日本政府のなかに有機農業を反政府的運動だとする認識が作られ、そのこともあって有機農業に対して政府はただ頑なな否定的対応に終始してきた。

そうした政府の対応に変化が見え始めたのは1980年代の後半からであった。まず、農村の地域活性化活動の類型として有機農業などに係わる活動を前向きに評価する動きが現れるようになり、続いて農産物の市場流通における表示ルールを設定を国の主導で進めるようになった。

1992年に国による「有機農産物等の特別表示ガイドライン」が制定された。また、同年にはガットウルグアイラウンド交渉妥結を見通して、それに対応する国の農政の基本方向として「新政策」が策定され、そのなかに「環境保全型農業の推進」が農政の一つの柱として位置づけられた。そこでは有機農業は環境保全型農業の一形態という位置づけがされることになった。政府の組織としては、1989年に農水省内に有機農業対策室が設置され、92年に環境保全型農業対策室に改称されている。同対策室は、2008年に農業環境対策課に発展改組された。

1999年には農業基本法に替わって食料・農業・農村基本法が制定された。この新基本法では、農業近代化政策、大規模農業経営育成政策は引き続き継承されることになったが、併せて農業・農村の有する多面的機能を重視するという方向が打ち出され、農業が本来有している物質循環機能の意義が書き込まれるなど、農政の環境シフトの方向も打ち出された。新基本法制定と同時に「持続的農業生産方式の導入促進法」が制定され、環境保全型農業推進について法律的根拠が作られた。また、同時に農産物の品質表示に関する「JAS法」が改正され、2000年にコーデックスの「オーガニックガイドライン」に準拠した有機農産物のJAS規格が設定され、それを踏まえた2001年には有機農産物の国家認証制度（有機JAS制度）が構築、実施された。

このように21世紀に入る頃から日本の農政においても有機農業や環境保全型農業に関する制度や施策が組み立て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だが、そこには深刻な歪みもあった。韓国の親環境農業政策においては、有機農業は環境農業の先端的取り組みであり、その展開方向を示すものと

して大きく位置づけられてきたと理解している。しかし、21世紀初頭における日本政府の政策では、有機農業は環境保全型農業の特殊な、小さな一類型と位置づけられ、環境保全型農業は有機農業の方向に展開するとは想定されていなかった。有機JAS制度は有機農産物流通の厳しい国家管理の制度として組み立てられており、そこには有機農業推進の政策意思はほぼまったく含意されていなかった。比喩的に言えば、有機農業は有機JAS制度の枠内に閉じこめられ、自由な展開力を失い、結果として力を落とし、国民の支援が作られぬままに衰退してしまうような状況に追い込まれていたのである。

こうした閉塞的な状況を打破するものとして2006年12月に有機農業推進法が制定された。これは有機農業を農業本来のあり方として位置づけ、国や地方自治体は有機農業者など民間の取り組みと連携して有機農業の推進の責務を負うと定めた画期的な法律であった。この法律は超党派の国会議員で構成される有機農業議員連盟からの議員提案によるもので、国の政策の転換を求めるものだった。議員連盟の設立趣意書には次のように記されていた。

「我々は、人類の生命維持に不可欠な食料は、本来、自然の摂理に根ざし、健康な土と水、大気のもとで生産された安全な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認識に立ち、自然の物質循環を基本とする生産活動、特に有機農業を積極的に推進することが喫緊の課題と考える」(2004年11月)

この法律の制定を転機として、日本では民間と国や自治体が連携して有機農業を推進するようになった。民間陣営ではこれを機に日本の有機農業は第Ⅱ世紀に移行しつつあると考えるようになってい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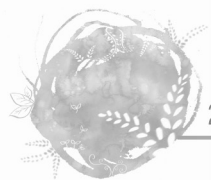
日本有機農業学会は、有機農業の社会化、政策化、制度化が本格的に展開してきた1999年に設立された。本学会は、有機農業推進議員連盟の取り組みに全面的に協力し、有機農業政策研究小委員会を設置し、本城昇、足立恭一郎らによる「有機農業推進法試案」を起草し議員連盟に提言するなど、有機農業推進法の制定には強く関与した。

2. 有機農業推進法とその後の政策展開

有機農業推進法は全15条の短い法律で、国の有機農業推進政策の枠組みを規定した基本法的性格のものである。この法律の特徴としては次の4点を指摘できる。

①政策推進の前提として有機農業推進の理念を掲げている。この点は先行して施行されていた有機JAS制度が、有機農業の社会的意義や推進理念に踏み込まず、有機農産物の規格基準の制定から開始されたことと対比的なものと理解されている。

②有機農業推進は、国と地方自治体の責務であると定め、そのために必要な政策項目が条文として明確に規定された。具体的な政策項目としては、「有機農業者等の支援」「技術開発等の促進」「消費者の理解と関心の増進」「有機農業者と消費者の相互理解の増進」「調査の実施」「国



及び地方公共団体以外の者が行う有機農業推進のための活動支援」 「国の地方公共団体に対する援助」 「有機農業者等の意見の反映」 の8項目が挙げられた。

③国と地方自治体は有機農業推進を有機農業者等の民間セクターとの協働で進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ている。民間との協働による有機農業推進という行政のあり方規定はこの法律の際だった特質となっている。

④国や自治体は有機農業推進に関して政策と計画を持つことが定められた。国は「有機農業推進基本方針」を策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され、都道府県は国の「基本方針」を踏まえて「有機農業推進計画」を定め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規定された。

国は、法律制定を受けて07年1月から有機農業推進基本方針の策定作業を開始し、07年4月には同方針を策定し公表した。対応は迅速であった。08年度からは国による有機農業総合支援対策が実施され、小規模ながら国の財政投入による有機農業支援施策が開始された。同対策は、総合支援の名の通り、内容は多岐にわたるが、なかでも「地域有機農業推進事業」いわゆる有機農業モデルタウン事業の実施効果は大きかった。09年度は補正予算による追加採択も含めて全国59箇所での事業が取り組まれた。これによって全国各地に「地域に広がる有機農業」のうねりが作られ始めている。

都道府県においては、国の「基本方針」を受けて「有機農業推進計画」の策定作業が進められ、09年度末には、ほぼすべての都道府県で計画策定が終了している。都道府県の推進計画では地域の有機農業者、消費者、関連事業者等との協働体制構築が重要課題とされており、計画策定作業は、都道府県当局と有機農業関係者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促すことにもなった。それぞれの地域における有機農業実態調査なども幅広く実施され、地域の有機農業の実像把握も進め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く。

有機農業は、これまで志ある農業者とそれを支援し有機農産物を尊い食べものとして食べていくとする消費者の連携によって維持され、発展が創られてきた。別言すれば有機農業は主として強い二者的関係性によって支えられてきたとも言える。ここにこれまでの有機農業の強さと狭さがあった。

しかし、有機農業推進法が制定されて、そこでは有機農業は一部の有志だけでなくすべての国民に利益をもたらす農業のあり方として位置づけ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のような新しい時代的段階において提起されてきた象徴的な政策課題が「地域に広がる有機農業」「有機の里づくり」というあり方だった。

地域には有機農業者もいれば多数の非有機農業者もいる。有機農産物を食べている消費者も、有機農産物を食べていない消費者も大勢いる。多数の非農業の産業も展開している。そうした多様な住民、多様な産業が生きている地域において、有機農業の広がりが共通した便益を地域にもたらしていく。そんなあり方の探求が「地域に広がる有機農業」「有機の里づくり」という政策的提案には含まれている。

多様な価値観、農業観を認め合い、その上で、地域と地域農業の今後のあり方として有機農業を積極的に位置付けていく。そんなあり方が「地域に広がる有機農業」取り組みの中から生まれてきている。そこでは地域の自然、地域の風土を、未来に生かしていこうとする地域づくりの新しい方向が模索されている。そこでは有機農業の展開を地域における新しい公共性の形成という政策展望の中で位置づけていくという視点も求め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

3. 有機農業の歩みを振り返る視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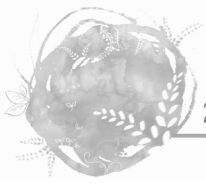
はなはだ簡略な紹介ではあったが、日本の有機農業の歩みと有機農業推進法制定後の政策動向の概要は以上のものであった。しかし、実際の有機農業の歩みにはさらに広い裾野があり、また、さまざまな社会的諸事象との関連の中でその歩みは進められてきた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ここでそれらについて本格的に論じることはできないが、留意すべきと思われる視点についていくつか摘記しておきたい。

まず、大きな点から記せば、日本社会の近代化の過程で、農業のあり方、自然と人間の関係性のあり方、生活のあり方、食や健康のあり方、労働のあり方、産業のあり方、都市と農村などの地域のあり方等が大きく変動・再編されるなかで、さまざまな矛盾が噴出するのだが、有機農業の形成と展開は、それらの矛盾を直視し、それへの真摯な対応としてあったという点である。近代の見直しという文脈からの把握という視点である。こうした視点からすれば有機農業の主張や実践には農本主義、重農主義の主張が色濃く含まれていることの意味が明らかになってくる。有機農業に込められた自然共生的な農の再建、社会における農の復権というメッセージは21世紀初頭の現在はより重いものとして受け止めら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

このことと密接に関連し、いま近代のあり方が見直される中で自給と循環の重視という思潮が静かに広がっているが、有機農業の身土不二の思想、物質循環、生命循環、地域循環の思想と取り組みは、そうした思潮とも連鎖している。例えば羽仁もと子(1873~1957)の提唱による「友の会」等の生活運動などには、大量消費社会の趨勢に抗し堅実な生活文化を模索したいとする意志が込められており、これらも有機農業に先行し、伴走する取り組みとも位置づけ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

公害問題や環境問題への民衆運動も、有機農業を支える重要な背景であった。田中正造(1841~1913)が告発した足尾鉍毒事件、チッソの水銀汚染による水俣病、昭和電工の水銀汚染による阿賀野川水銀中毒、神岡鉍山(三井金属)のカドミウム汚染によるイタイタイ病、東邦亜鉛安中製錬所によるカドミウム公害、さらには除草剤によるダイオキシン汚染問題などが日本の有機農業運動の担い手に与えた影響はきわめて大きかった。

食や医や健康の新しいあり方を模索する草の根の取り組みも有機農業運動と伴走する重要な存在だった。日本ではこの領域は「食養」と概括されている。日本的食養の源流としては、13世紀に仏教禅宗派の曹道宗を拓いた道元(1200~1253)の『典座教訓』、『養生訓』を著した本草学者の貝原益軒(1630~1713)などが挙げられるが、近年のこととしては、軍医の石塚左玄(1851



~1909)とその流れを汲む桜沢如一(1893~1966)の食養法の影響力は大きかった。石塚は健康の基本原理として身土不二と一物全体食を強調し、桜沢は中国の易学の陰陽説を食べもの分類に適用し、難病治療や健康な食のあり方を提示した。しかし、桜沢の食養法はかなり機械的なもので現実には問題点も少なくなかったので、医師の日野厚(1919~1989)は、患者の実際に則した食養法を模索し「生態学的栄養学」の構築を提唱した。

社会思想の分野では、20世紀初頭に興った自然志向の文学と文学運動も有機農業運動の一つの先行者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徳富蘆花(1868~1927)の『みみずのたわごと』、国木田独歩(1871~1908)の『武蔵野』、長塚節(1879~1915)の『土』、宮沢賢治(1896~1933)の『春の修羅』などは、今日の自然共生思想と強く連関している。文学集団白樺派のリーダーの一人だった武者小路実篤(1885~1976)が提唱し拓いた「新しき村」は現在でも宮崎県と埼玉県でその取り組みが継続されているが、そこでの農業の営みは有機農業である。

世界救世教の岡田茂吉が「自然農法」を提唱したと本稿の最初に書いたが、岡田の最初の宗教活動の場は大本教であった。大本教の教祖出口なお(1837~1918)は「お土を大切にしなさい」と説き、その宗教思想は農業重視が基本におかれていた。同教は戦後、民間の農業技術団体として「愛善みずほ会」を設立し、現在も活動が続けられている。「愛善みずほ会」が、現在提唱している農業のあり方も有機農業となっている。

1930年に開教した松緑神道大和山(開祖:田澤清四郎)も自然と農業を重視する教派で、信者には有機農業者が多く、有機農業の資材開発などにも取り組んでいる。

キリスト教系にも有機農業を推進する団体はある。小谷純一(1910~2004)による全国愛農会もその一つである。小谷は無教会派の内村鑑三の影響を強く受けたキリスト者であり、宗教活動と農業運動を融合した愛農運動を提唱し、その理念の下で農業高等学校を設立し現在に至っている。ここでも推進する農業は有機農業である。

キリスト教の伝道者養成の場として「農村伝導神学校」(町田市鶴川)が設けられているが、そこには農場が拓かれており、有機農業が取り組まれている。また、栃木県那須ヶ原でアジアの農民教育に取り組んでいる「アジア学院」は1973年に同神学校から分かれて設立されたものだが、ここでも有機農業が教えられている。

少し歴史を遡れば、戦前期に貧しい人々の友愛を説きキリスト教的社会主義と協同組合的社会を提唱した賀川豊彦(1888~1960)も農業重視の人であり、彼はヨーロッパの独立自営農民を理想として農林複合の「立体農業」を提案した。これも内容的には有機農業であった。賀川の提案に応えた実践は少例ではあるが続けられている。

有機農業技術に関しては、近代化以前の農業技術から多くのものが継承されてきた。化学肥料や農薬に頼らず、農地の自然と作物の生命力に依存するという有機農業の技術論は近代化以前の農業技術論の王道であった。日本では戦後の農地改革後、1950年代はそうした伝統技術が民間技術として大きく開花した時期だった。この頃の民間技術は今日の日本における有機農業技術の重要な骨格をなしている。

日本の有機農業では農業経営の重要なあり方として有畜複合農業が提唱されてきた。この主張

は農業経営形態論としては小農主義の流れを汲むものと考えることができる。最近の実践事例からは、有機農業はさまざまな経営形態に適合的な農業のあり方論であり、小農主義だけを基盤とする訳ではないが、しかし、小農論は有機農業の重要な基盤だと言うことは間違いない。小農論はすなわち家族経営論であり、また小規模経営論でもあり、農業史家の守田志郎（1924~1977）の『農業は農業である』や民俗学者の宮本常一（1907~1981）の常民論などとも重なってくる。また、シューマッハーの『スモールイズビューティフル』（1973）や適正技術論などの考え方や社会ビジョンとも繋がっている。小農論の系譜を受け継ぎ、それを現代的にどのような発展充実していくかも有機農業論の重要な課題となっている。

小農論は暮らしと自然を重視した風土的な地域農業論とも密接に繋がっている。先に紹介したように日本の有機農業は「地域に広がる有機農業」としての展開が重要課題となる局面にさしかかっている。しかし、率直に言ってこの領域は日本の有機農業にとって不得意な分野である。有機農業には他との差異を明確にするところから出発するという体質が強く、異なった主体が共存し協力しあって地域を創るというあり方には馴染みにくい面があった。これらのことについても、有機農業以外のさまざまな取り組みの蓄積に学びながら、一歩ずつ活動の輪を広げ自己革新を図っていくことが望まれている。

<参考文献>

日本の有機農業の歩みと政策動向について総括的に論じた基本文献としては以下のようなものがある。
 国民生活センター編、多辺田政弘、榎澗俊子稿『日本の有機農業運動』日本経済評論社、1981年
 保田茂『日本の有機農業』ダイヤモンド社、1986年
 本城昇『日本の有機農業——政策と法制度の課題』農文協、2004年
 日本有機農業学会編『有機農業法のビジョンと可能性』（有機農業研究年報Vol.5）コモンズ、2005年
 榎澗俊子『有機農業運動と<提携>のネットワーク』新曜社、2008年

また、代表的な基本資料集としては次のものがある。

協同組合経営研究所編『暗夜に種を播く如く一楽照雄——協同組合 / 有機農業運動の思想と実践』農文協、2009年

なお、報告者自身のこのテーマに関する論考としては次のようなものがある。

中島紀一「昭和戦後期における民間稲作農法の展開」『農耕の技術と文化』18号、1995年

中島紀一「有機農業推進法制定の意義と今後への期待（上、中、下）」『農林経済』2007年2月22日号、2月26日号、3月1日号

中島紀一「日本の有機農業運動の現在と経緯」『季刊 a t』12号、2008年6月

中島紀一「有機農業推進法制定の意義と今後への政策課題」『農業と経済』2009年4月臨時増刊号

中島紀一「いのち育む農業への転換を」『農業と経済』2010年1月臨時増刊号

中島紀一「推進法制定四年目を迎えた有機農業政策の動向と民間での取り組みの展開」『有機農業研究』（日本有機農業学会）、Vol.2-1、2010年